



정책동향

산업자원부, 수출중소 지원 '내실화' 주력

산업자원부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내년 500개 업체를 선정,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으로 무역금융, 수출보험 등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 조환익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11명의 수출지원센터장, 수출보험공사 등 관계자들과 함께 '수출지원센터 기능 활성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지원센터가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원 스톱 서비스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자부는 올해 1천개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을 내년부터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으로 내실화해 500개 업체를 엄선, 집중 지원키로 했다. 수출기업 수출지원센터를 위해 배정된 내년도 예산은 총 39억 3600만원, 퇴직인력활용 지원사업 예산이 올해 46억원에서 내년에 21억원 규모로 축소된 대신 중소기업수출기업화를 위해 10억원이 새롭게 배정됐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대상 선정과 관련, 기존의 수출지원 대상업체 중 내수기업이나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유망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선정한 수출유망기업 가운데 연간 매출액이 5억원 이상, 설립연도 2년 이상인 기업을 지정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수출실적 300만 달러 이하 혹은 매출액 중 수출액 70%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져 수출의지가 없는 중

소기업조차 지원받는 불공정한 사례가 많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지원센터 파견기관의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지며 수출지원업무도 무역금융, 수출보험 등 업계의 수요가 있고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의 내년도 수출지원예산 157억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선정 기업에 우선 지원된다. 해당 기업들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거나 내년 3월 선보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이버 실크로드 2000'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유관 기관들의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파견자들에게 관련 업무를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전결권을 확대, 부여하고 전체 11개 지원센터에 대한 실적을 연도별, 분기별로 평가해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수출지원센터가 그동안 단순 창구 역할에 머물렀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신규 벤처기업을 집중 발굴, 수출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수출지원센터장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 업무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업무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수출지원센터를 순회 방문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財界, “난공불락 日시장 뚫겠다”

「엔고호기를 맞아 일본시장을 뚫어라」

정부와 재계가 엔고로 수출확대의 유리한 기회를 맞고 있는 일본시장 공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관 합동으로 품목별 수출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출촉진단 파견, 일본어 전용 인터넷사이트 개설 및 인터넷 무역지원, 전시회 참가, 디자인 개발, 기술개발 지원 등에 주력하고 있다.

난공불락의 일본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제품으로 선정된 품목은 실버산업, 전력기자재, 건축자재 등 3종류, 실버산업 일본은 세계최고의 고령화 국가(64세 이상이 전체인구의 4분의 1)로 실버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9.4%대. 2010년엔 230억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휠체어 및 전동휠체어, 보행차, 보행기, 지팡이, 리프트, 간호용 침대,

보청기, 입욕보조용구 등 17개 품목이 유망하다. 산자부는 실버산업의 대일수출 촉진을 위해 실버용품 수출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간 또는 시험검사기관간 승인·검사 및 인증획득(JIS, SG마크)을 위한 상호인정협정체결을 추진할 계획.

일본의 전력기자재 시장은 연간 3조6,000억엔 규모이며, 전력기자재중 퓨우즈, 개폐기 등 주요품목의 수입규모('98년)도 29억9,600만달러에 달했다. 일본은 전력요금 규제완화와 원가절감을 위한 해외조달 확대 등으로 올들어 전력기자재의 수출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는 퓨우즈, 개폐기, 커넥트, 배전반, 자동제어반, 전선, 광섬유 케이블 등을 집중공략할 만하다.

산업자원부, 시험소 상호인정협정 확대

내년부터 시험소 상호인정협약이 전세계로 확대, 무역상 기술장벽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0일 개최된 국제시험소인정기구(ILAC) 총회에서 아·태시험소인정기구(APLAC)와 유럽인정협력기구(EA) 양대 지역기구간 신뢰성을 구축, 내년 6월까지 전세계적으로 단일한 상호인정협약을 체결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국가간 무역기술 장벽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복 시험을 줄임으로써 수출기업의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게 됐다. 또 우리나라 시험성적서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수출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것.

전문가들은 시험소 상호인정협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시험 방법과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술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표준원에서 공인한 국내 시험기관 88개 가운데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해 수출

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기관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원은 국내 기관들의 기술 수준을 제고하는 동시에 11개 부처 48개 개별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규제 분야 시험검사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높여나가

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일환으로 표준원은 각 정부기관이 시험, 검사, 시스템 및 제품 인증 관련 제도를 빠른 시일내 도입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 '산업자원통계' 사이트 주요자료 분기별 정리

수출입 거래를 하다보면 무역관련 통계가 필요할 때가 있다. 과거엔 통계하나 구하려면 도서관을 뒤지는 등 별도의 수고를 해야 했지만 요즘은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관세청이나 한국무역정보통신의 KTNET, 무역협회의 KOTIS 등에서 무역관련 전문통계가 공급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사이트 가운데 수출입 관련 통계는 물론 산업 등과 관련된 다양하고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다.

산업자원부 사이트중 '산업자원통계'(http://www.mocie.go.kr/산업자원통계/통계목록.htm) 코너가 그것이다. 산업자원부의 주요통계 및 관련자료를 분기별로 종합·정리한 것으로 향후 월 단위로

통계가 제공될 예정이다.

'산업자원통계'는 △수출입실적, 설비투자동향, 통화 금리 환율 주가 등의 기본통계 △지역별 품목별 수출입실적, 한국의 해외투자 등의 무역투자·국제협력 △자원·에너지 △산업·기술정책 △섬유, 신발, 석유화학, 철강, 일반기계 등 산업별 동향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어 해당 항목을 클릭하면 바로 통계가 화면에 나타난다.

이밖에 산업자원부의 홈페이지에서 정보자료실-국가별정보를 클릭하면 주요 50개국의 경제현황,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관계(교역·투자·산업협력 등), 통상현안 및 협력방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 韓·日 상호認定협정 2차 실무협의

한·일간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체결을 위한 제2차 설명회 및 실무협의회가 지난 11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설명회가 일본의 표준 및 인증제도에 대한 우리측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의 국제표준정책과 JIS, 전기용품, 통신기기, 압력용기, 기계류 분야 표준 및 인증제도가 소

개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실무협의회에서 양측은 향후 MRA 추진과 관련된 공식협상 개시시점, 협상대상품목, 상호인정범위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MRA가 양국의 표준제도를 상호인정함으로써 수출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중복 시험 및 인증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협정이라고 말하고 일본과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의 수입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MRA 개념과 한일간 추진 현황〉

자국의 제품, 공정, 서비스가 상대국 표준 및 기술 규정의 요건에 적합한지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상대국이 동등하게 인정하는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협정.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시 MR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 7월 도쿄에서 제1차 설명회 및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MRA는 중복 시험 및 인증에 따르는 부담을 줄임으로써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해외무역장벽을 해소하는 효과를 갖는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외에도 캐나다, EU와도 상호인정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선진국과 기술교류 확대기대

우리나라가 '국제 IMS(지능형 생산시스템) 프로그램' 정회원국으로 가입, 첨단 기술 습득, 선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12일 호주 타스마니아에서 개최된 국제 IMS 프로그램 국제운영위원회 제10차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정회원국 가입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95년 일본, 미국, 호주, 캐나다, EU(유럽연합)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1개국으로 구성, 발족된 '국제 IMS 프로그램'은 21세기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인간과 기계, 정보통신기술 및 환경기술이 통합된 차세대생산시스템을 개발하는 국제공동연구프로그램.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가입을 통해 발원권 및 의결권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차세대생산시스템 연구개발 및 표준블럭 형성 과정에서 선진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향

후 국내 관련기업,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해질 뿐만 아니라 해외 선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글로벌화에 필요한 생산기법 및 경영기업 습득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 용어

〈IMS란〉

21세기 제조환경이 지능화, 고품위화, 통합화, 쾌적화, 국제화되는데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인간과 기계, 정보통신기술 및 환경기술이 통합된 차세대생산시스템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제품의 수주, 개발, 생산, 물류, 경영 등 생산시스템의 각 부문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 가장 효율적인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70년대 유연생산시스템(FMS)은 설비집약적 산업환경에서 제조 공정의 자동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80년대 컴퓨

터통합생산시스템(CIM)은 부분적 자동화를 통합, 수주에서 출하까지 종합 관리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IMS는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에 적합한 지식 집

약적 시스템으로 첨단기술습득, 자원효율화, 제품 주기 단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 장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소기업청, ‘中企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

중소기업청은 IMF이후 내수 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하는 한편 L/C개설, 원자재 구매자금지원 등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인증마크를 획득치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해외 규격인증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인증신청(예비신청), 기술지원(컨설팅), 제품시험분석 및 수정·보완, 공장심사비용 등 인증획득비용의 70%까지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인증분야는 CE(유럽공동체), NEMKO(노르웨이), SEMKO(스웨덴), TUV/VDE(독일), UL/ETL/FCC/QS-9000(미국), CSA(캐나다), GOST(러시아), CCIB(중국), JIS/T(일본) 등이다. 중소기업이 각 지방중기청에 신청하면 본청에서 심사·선정하게 된다. 선정이 되면 중소기업

과 지원기관, 중기청이 약정을 체결하게 되고 이때 중기청이 착수금 35%를 국고로 지원해 준다. 이후 해외인증을 획득하면 잔여금 35%를 지원하게 된다.

중기청에 따르면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수출길이 막혔던 중소기업이 정부의 지원으로 인증마크를 획득, 올해 상반기 중에만 약 3억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업체가 획득한 해외인증마크는 CE가 118개로 가장 많았고 UL 30개, QS-9000 23개 순으로 나타났다. 또 수출효과를 보면 조사대상 200개 업체중 78%인 156개 업체가 2억940만달러를 신규로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그 동안 대만 등지로부터 수입에 의존했던 전기·전자 등 기초부품에 대한 인증마크 취득으로 수입대체효과도 거뒀다.

중기청은 올해 해외인증획득 지원과 관련한 정부 예산 58억원을 내년에는 83억원으로 늘려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 MOF KS규격 개정 추진

계기용변압변류기(MOF)에 절연유 열화 진단장

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KS규격 개정안

이 검토되고 있어 MOF업계는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최근 MOF의 KS규격 가운데 절연유 열화진단 장비 내장 의무자화를 주요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 업계의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개정안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지난 9월말 기술표준원에 개정을 요구해 옴에따라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기술표준원은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MOF 내부에 열화감지센서를 설치하고 기존의 단자함외에 절연유열화 감시장치용 단자함을 별도 설치하는 내용의 KS개정안을 지난 9월말 기술표준원에 제안한 바 있다. MOF업계는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절연유 열화 진단 장비 설치보다는 재검정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MOF는 변압기와 달리 2차측에 부하가 거의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절연유 열

화진단 장치는 안전 제고에 실효성이 적다"고 전체. "전력량계가 검정연한이 7년이고 일본도 MOF의 검정연한을 10년으로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MOF의 검정연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OF의 재검정제도는 지난 '87년 8월 폐지됐으며 그 이전에는 검정연한을 10년으로 규정해 설치이후 매 10년마다 검정을 의무적으로 다시 받도록 했다.

이와관련 또다른 관계자는 "이번에 채용이 검토되고 있는 절연유열화 진단센서는 현재 한 개 업체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며 이에대한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수의견이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절연유열화진단장비 내장은 정확하고 일상적인 진단이 가능해져 사고예방은 물론 수용가 설비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도 없지 않다. 이와관련 기술표준원 담당자는 "업계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으므로 설불리 개정할 수 없다"며 "올연말쯤 전기안전공사, 업계, 한전 관계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